

‘尹가족 의혹’ 중앙지검 수사 주목

윤석열 처가·측근 의혹 고소·고발건 수사

일부 고소·고발인 조사 진행...본격 착수

‘뇌물수수 의혹’ 등 배당도 안 된 사건도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의 향후 수사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총장 부인, 장모, 측근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사건 배당도 되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처가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등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근 부인 김모씨와 장모 최모씨 등이 고소·고발된 3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넘겨받고 고소·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김씨는 이에 공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수사를 진행한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일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최씨의 동업자인 정대택씨도 지난 2월 윤 총장과 김씨, 최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의 경우 처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형사6부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지난 4월 김씨와 최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가 상주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김씨가 이 과정에서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최씨가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연루된 의혹 등도 고발장에 담겼다.

검찰은 고발에 참여한 조대진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총장 처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에 담긴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수사 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형사1부에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012년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윤 전 세무서장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은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고, 윤 총장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아직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의혹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최신 휴대전화 싸게 팝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30대 검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수백 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11명으로부터 43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신 휴대전화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없는 피해자들에게서 구매 대금만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금지 마스크 팔고 알선료 3억여원 받은 직원 구속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를 틈타 시중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하고 알선료 등을 챙긴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 6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미포장 마스크 105만장을 판매하고 수익원의 알선료를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제조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다.

또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대표와 마스크를 훔쳐 판매한 직원 등 5명은 약사법 위반·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판매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인 A씨와 업체대표 B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통업자 C씨에게 유통이 금지된 미포장 마스크 105만개를 7억5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유통업자 C씨로부터 3억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동료직원과 화물차 기사 등과 결탁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8만개를 빼돌려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사흘 만에 또’ 상습 행패 50대 구속

교도소를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동네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동네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재물손괴)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 B(35)씨의 말에 격분, B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만취 상태로 동구 동명동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인들을 상대로 갖은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한 뒤 이달 4일 출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총선 투표지 촬영 단속방 울린 50대 벌금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게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 단체 채팅방 2곳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식발 투쟁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법제화와 코로나19 집단교섭 촉구 등을 촉구하며 식발식을 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부정수급...100개 가운데 87개

부정수급 해마다 증가...최근 3년간 512억에 이르러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적발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요

양시설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한 노인요양시설 2587개소 중 87%에 달하는 2257개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적발된 금액은 512억원이 넘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금액 역시 최근 3년간 해마다

늘어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가 감소 위반이 388억원(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 81억원(15.8%), 산정기준위반 33억원(6.4%), 자격기준위반 등 기타 위반이 11억원(2.1%)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급여는

141만6438건, 2조4151억원에 달한다.

김원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